

민주, 전대 국면…당권투쟁 조기 점화하나

당 대표·최고위원 경선 참여 후보군 막판 장고

광주·전남 지역의원 5명 지도부 진입 관심

민주당이 3월말이나 4월초 임시 전당대회를 통해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지도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력한 혁신과 비전 제시로 대선 패배의 후폭풍에 휩싸인 민주당의 중심을 잡고 오는 4월과 10월 재보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지도부를 누가 맡을 것인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누가 이번 임시 전당대회에서 지도부에 진입, 위기 국면에 빠져있는 호남 정치권의 활로를 개척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7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임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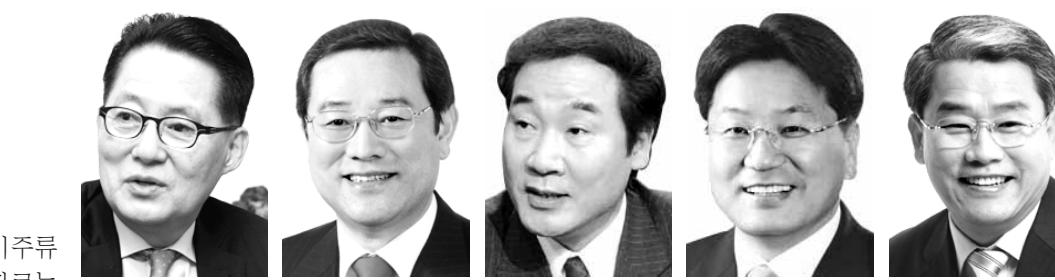
원을 분리 선출함에 따라 지도부 경선 참여를 모색해왔던 원내와 인사들은 막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우선 당 대표 경선과 관련, 당내에서는 김한길·추미애·박영선·정세균·신기남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서는 박지원, 이용섭 의원이 당 대표 경선 참여를 놓고 막판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에서는 김부겸 전 최고위원과 정동영·천정배·이부영·정대철 상임고문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누가 주류와 비주류의 대표 주자로 나설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비주류 대표 주자로는
김한길 의원이

박지원 의원
이용섭 의원
이낙연 의원

강기정 의원
김동철 의원

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군으로는 유성열, 설 훈, 김현미, 우상호, 유원식, 이목희, 민병두, 오영식, 신계륜, 조경태, 안민석, 이종걸 의원 등이 꼽히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이낙연, 김동철, 강기정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 도전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는 18일 회동을 갖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과 관련, 후보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주류와 비주류 대표 주자의 양자 대결로 당권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경우, 일부 당권 주자들은 최고위원 경선 참여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개헌 논의 ‘만지작’

박기춘 원내대표 국회 연설, 개헌특위 설치 제안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7일 새 정치 실현을 위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또 민주당 내에서 김승남 의원을 비롯해 상당수 의원이 이에 적극적일 뿐 아니라 여권의 한 죽인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까지 개헌 활동에 나설 뜻을 밝혀, 개헌 논의가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대통령도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정치혁신에 동참해

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 갈등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자리 잡고 있다”며 “정치혁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고 개헌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회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필요한 권한만 갖고 나머지는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며 “특권 포기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민생과 변화를 이끄는 창조적 국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와 관련, “마땅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임명, 최대석 인

수위원장의 돌연 사퇴, 이동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논란, 김용준 총리 후보자 자진사퇴까지 ‘당선인의 인사수첩’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느냐”며 “인사청문회법을 탓할 일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오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새정부의 암기가 시작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개헌논의가 어려워진다”면서 “설 이후 분권형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대료 의원에게 보내 서신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정·부통령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 의원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만간 구체적 활동에 나설 뜻을表했다.

/박기춘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6명

지역 발전 공동요구안 인수위 전달

김성곤(여수·갑)·주승용(여수을·우윤근·광양)·김선동(순천·곡성)·김승남(고흥·보성)·김광진(비례) 의원 등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6명이 지역발전 공동요구안을 마련, 대통령 인수위와 정부 등에 전달했다.

7일 김선동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김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주승용 의원)실에서 모임을 열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요구안을 채택했다.

공동 요구안은 ▲임진왜란 전적지 역사 공원화 ▲여수 신항 대체항만

(신복항) 조기 건설 등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방안 마련 ▲광양만 배후단지 활성화 ▲나로호 성공 발사에 따른 고흥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 ▲여수~남해 간 한려대교 조기 건설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조기 건설 등 6개 안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순천시에 입점을 추진 중인 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입점 저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일답을 털어놨다.

이 의원은 이어 “점잖게 예산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기

재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광주·전남의 열악한 현실은 나를 반쯤 미친 미수조정위원회로 만들었다”며 “이 같은 ‘무대포’ 정신이 없었다면 지역 현안 예산 반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의 ‘무대포’ 정신은 지난 2010년에도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등을 강행하면서 지역 현안 사업(무안 현경~해제고속도로 건설)을 취소한 것에 반발, 장관실에서 이를 동안 단식농성을 벌여, 결국 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무원 사회에서는 ‘악명’(?)이 자자하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막판 예산을 과정에 있었던 기획재정부 실무자들을 찾아내 의자를 걷어차고 욕설과 협박까지 하며 지역 예산 반영을 요구했었다”며 “내가 생각해도 그 때는 약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후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없는 우주항공시설을 조기 예상에 축출할 수 없는 점에서 우주항공산업 진작화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규정이 조속히 입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만 효율적인 항공우주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훈훈한 설명절 되십시오.

계사년에는 사랑과 우정의 마음을 쉽게 전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한해도 희망차고 새로운 한해가 되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믿음이 있는 대학·믿음을 주는 대학 —————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